

〈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〉

모두 말씀

2018. 10. 17.(수)

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금융위원회 위원장

최 종 구

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☐ 여러분 반갑습니다.
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☐ 오늘 이 자리는,
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추어
은행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
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
자리입니다.

☐ 바쁘신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,
은행장님들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< ❶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배경 >

☐ 이번 정부 금융정책방향의
가장 중요한 과제가 생산적 금융입니다.

- 가계부채·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몰린 자금을
생산적·혁신적 분야로 물꼬를 돌려
금융이 실물성장을 지원하고
그 과정에서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
금융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.

☐ 생산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서는,
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분야에 대한
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.

□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
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
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
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·중소기업에게는
은행의 문턱이 크게 높았습니다.

- 우리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달하는
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,
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,000억원에 불과합니다.

※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 : 400조원,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: 360조원

- 대출과정에서 동산자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.

□ 정부가 지난 5월,
‘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’을 발표한 것도
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
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-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
적절히 활용된다면,
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·중소기업이
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함으로써
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.
- 이와 함께 동산금융은 동산자산의 다양성으로 인해
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도 있고,
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
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[왜 동산금융인가?]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 Win - Win

- ※ ①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부동산이 없는 **창업, 초기중소기업**도 **담보대출 이용**이 가능
- "Key of Access to Finance"(World Bank)
- ②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**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** → 담보력도 연속적·안정적으로 강화되어 **성장자금 공급**에 기여
- "Smooth Curve"(美 CFA)
-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**경기변동에 덜 민감**하며 **유연한 대처** 가능
- "Asset Package is a Blend"(英회계협회(ICAEW))
- ④ 적절히 관리될 경우 **은행건전성도 제고**
- 적절히 관리될 경우 위험가중자산 계상(BIS 비율), 충당금 적립 등에 이점

< ② 동산금융 활성화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>

□ 정부는 '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'을 마련하는 과정에서,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
① 첫째, 과거 동산담보 활용에 제한을 두었던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.

-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, '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'을 개편하여, 동산담보 활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.

- 개별 은행도 은행연합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난 8월 관련 내규를 전면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산담보 활용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
[동산담보의 활용폭 확대] 은행연합회의 동산담보 가이드라인 개편(6.29일)
→ 개별은행 내규에 반영(8월말)

※ **(과거)** ❶제조업의 ❷일부동산(무동력기계, 원재료 등)만이 ❸전용 대출
상품(1개)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❹담보인정비율도 40%로 획일화
(개선) ❶모든기업의 ❷모든동산이 ❸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
가능하며 ❹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

② 둘째, 기업과 은행의 **활용유인**을 높이기 위해
정책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동산담보를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
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
지난 5월 ‘스마트 동산담보대출’을 출시하였습니다.
- 신용보증기금은 6월 ‘동산담보 특례보증’을,
산업은행은 8월 ‘동산담보 특별온렌딩’을 도입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동산담보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,
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[정책금융 상품의 구체적 내용]

- ※ ① 기업은행의 ‘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’(5.28일 출시, 3년간 1조원)
- 중소기업의 기계, 재고 등을 담보로 금리 우대(최대 1.3%p) 및
한도 확대(40% 범위내)
- ② 신용보증기금의 “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”(6.28일 출시, 3년간 0.5조원)
-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특례보증을 신청시 동산담보대출금액의
50% 내에서 최대 5억원 보증 지원(보증비율 90%, 보증료 0.2%p 인하)
- ③ 산업은행의 “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”(8.27일 출시, 3년간 0.5조원)
- 산은이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상업체,
대출금액 등 결정(한도 약 20% 확대, 금리 약 0.5%p~1.1%p 인하 효과)

③ 셋째, 법·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고자 합니다.

- 은행권은 동산담보 활성화가 더딘 주요 이유로 담보권자(은행)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5월,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, 은행권이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먼저,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3자 열람,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등 대법원 규칙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, 지난 5월 규칙을 개정하여 8월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그 외,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,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,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법무부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[제도개선 관련 구체적 내용]

- ※ ① **제도개선 완료** 사항(법원행정처, 5월 개정 → 8.1일 시행) :
- (1) 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, (2)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
- ② **제도개선 추진** 사항(금융위-법무부 공동 TF(9.21일 출범) 운영 중) :
- (1) 담보권 존속기한(현행 5년) 폐지 또는 기한 확대(10년) 검토
 - (2) 등기주체 확대 검토 :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등기 허용
 - (3) 처벌조항 신설 검토 : 고의 훼손·은닉·처분시 처벌조항 마련
 - (4)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검토 :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권자에게 당연 배당
 - (5) 사적실행 활성화 검토 : 사적실행의 요건을 명확화 또는 완화
 - (6) 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(철강 구부림 등) 검토
 - (7) 추가 검토 : (1) 일괄담보 도입, (2) 미래매출채권 담보 활성화

④ 마지막으로, '평가-관리-회수'라는,
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
(1)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
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
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 '동산감정평가법인 Open Pool'도
은행연합회를 통해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

(2) 또한, IoT 등 신기술 기반의
사후관리 인프라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.

-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
신기술 기반의 사후관리 방식은
현재,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
4분기에는 IoT 사후관리 표준기준을 마련하여
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*하겠습니다.

* 사진 기록물 보관 의무, 주기적 현장점검이 필수인 체크리스트 부담 완화 등

(3) 나아가,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,
기계거래소, 캠코 등 매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- 4분기에는 은행권 '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' 개정을 통해
동산담보 관련 사적실행 및 처분 절차·기준을 마련하고,

- 내년 상반기에는 기계자산 이력시스템 도입(기계거래소),
매각시장연계 포탈(캠코) 등 효율적인 매각인프라도
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< ③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 현황 >

- 최근 16개 은행이 모두 기존 대출상품을 개편하였고, 그 중 4개 은행은 별도의 신상품을 마련하는 등 은행권이 동산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높아지거나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[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제고된 사례]

- ○○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**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**을 담보로 **10억원의 자금**을 지원

[중소기업의 금융비용완화에 기여한 사례]

- 기계제조업 D社は ‘초정밀 고속 가공기’를 담보로 제공하여 **2.79%p 금리우대**, 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は ‘기계기구’를 담보로 제공하여 **5.36%p 금리우대**

- 또한,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기술 기반(IoT) 사후관리방식이 도입, 확산되면서 은행권의 관리부담이 경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
※ 5개 은행은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(3개 은행은 기도입)할 예정이고, 5개 은행은 내년중 도입을 추진 중이며, 4개 은행도 도입을 검토

[은행의 관리부담 경감에 기여한 사례]

- (4.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)
- 경비용역 파견 : 1일당 약 8만원 × 30일 = **240만원**
- IoT 디바이스 부착 : 기계당 약 2만원(30일) × 기계 4.6개 = **9.2만원**

-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, 4년 6개월간 지속해서 감소했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3분기말 기준,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작지만 의미있는 반등이라 하겠습니다.

※ 동산담보대출 잔액(억원) : ('14.1Q) 6,007 → ('15.1Q) 5,297 → ('16.1Q) 4,162 → ('17.1Q) 2,912 → ('18.1Q) 2,066 → ('18.3Q) 2,345

- 특히,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
작년 이맘때와 비교하여 3배가량 증가한 점은
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.

※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(억원) : ('17.3Q) 172.5 → ('18.3Q) 515.1

- 은행권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
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
앞으로 취급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< ④ 당부말씀 >

- ☐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
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
튼튼한 우군(友軍)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.
물꼬가 트이고 경험 축적되면
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
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 ☐ 오늘 이 자리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,
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,
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함으로써,
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,
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- 은행장 여러분의
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- 나아가 현장에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은 언제든지 가감 없이 제시해주시면,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

-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부진, 내수정체 등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악화로 이어져, 자동차 부품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얼마전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업체들로부터 해외판로 개척 등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- 금융측면에선, 금융권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전망을 어둡게 보고 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.
-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.
-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나,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,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- 아시다시피,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1·2·3차 협력업체가 공생하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·생산·수출 등 국가·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니다.

-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“뿌리”인
부품업체들의 자금사정 등 경영여건 악화는
부품업체들의 R&D 경쟁력 뿐만 아니라,
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
이어지게 될 것입니다.
- 금융당국에서도
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만,
자동차 1대당 들어가는 2만여개의 부품수만큼이나
업체수가 많습니다.
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
- 자동차 부품업체 개별회사들의
재무·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여신회수 등
은행권의 ‘비오는데 우산뺏는’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
은행장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
당부드립니다.
- 내가 부품업체 사장이라면 어떤 심정일까하는
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원과 관련해서는,
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
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